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45호 / 7월 31일

'중국경제붕괴론'에 대한 중국내 평가

1. 개요

- 개혁·개방이후 중국이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,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허구이며 경제에 내재된 모순으로 인해 언젠가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, 소위 '중국경제붕괴론'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.
- 이와 같은 서방측의 시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종의 음모론적인 주장이라고 평가절하 하고, 국내외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통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'중국경제붕괴론'은 과장된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하고 있음.

2. '중국경제붕괴론'의 주요 내용

- 1990년대부터 서방에서는 중국의 발전이 결국 서방세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소위 '중국위협론'이 제기되어 왔음.
 -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

하자 중국의 경제 발전은 통계숫자상의 조작에 불과하고 중국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‘중국경제붕괴론’이 등장하였음.

- 중국경제붕괴론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.
 - 첫째,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 경제가 7%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, 이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결과임.
 - 둘째, 현재의 은행 부실은 은행이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은 상태로, 은행의 파산은 시간문제임.
 - o 공식 통계로는 국유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25.3%이지만 실제로는 50% 내지 80%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함.
 - 셋째, WTO 가입으로 국유기업과 농촌부문에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인데 이들이 사회 불만세력이 되어 경제·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임.

3.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

-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쟈오샤오(趙曉) 박사는 재정수입과 도시주민의 소득증가율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은 허구가 아니라고 주장함.
 - 중국경제는 7% 이상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, 재정수입 역시 10~15%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.
 - o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라디(N. Lardy) 박사도 중국의 연간 輸入額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정부의 공식 성장률에 신뢰감을 표시함.
- 중국국민경제연구소 판강(樊綱) 소장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, 이로 인해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함.

- 중국의 경우 은행의 부실채권은 은행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안임.
 - o 현재 중국의 정부채무는 GDP의 16%로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며, 정부의 재정능력상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.
- 실업문제에 대해서는, 중국붕괴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실업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, 중국 정부가 고용안정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.
-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예산항목에서 사회보장 관련 자금을 매년 두 배 정도 증액하고 있으며, 내년에는 100억 元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임.
- 그러나 통계문제의 경우, 중국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시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임.
- 미국 MIT대학의 레스터 서로(Lester Thurow), 피츠버그대학의 로스키(Thomas Rawski) 교수 등은 최근 수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통계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한 바 있음.
 - 중국정부도 기존의 통계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함을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작성 및 취합방식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음.
- 한편, 중국학자들은 중국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촌문제의 해결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함.
- 판강(樊綱) 소장 및 런루오언(任若恩) 북경항공대학 교수는 중국의 당면 과제로 ▲농촌의 공업화 및 도시화, ▲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 이동, ▲도시실업문제 해결과 사회보장제도 개선, ▲국유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등을 지적함.(***)